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장 | parkinss@daum.net

I. 들어가는 말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분쟁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예방우선순위조사보고서(Preventive Priorities Survey)」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대만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지역으로 선정하였다.¹⁾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경고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미국을 ‘평화의 파괴자’라고 비난했고, 낸시 펠로시 의장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인권과 법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며 반박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전후하여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 및 전함이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인민해방군은 곧바로 대만 주위의 6개 지역에 항행금지지역을 선포하여 대만을 포위하고 실탄 사격과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72시간 동안 이어진 군사훈련에서 중국군은 대만섬 전체를 봉쇄하고 타이베이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전투기와 군함이 대만해협의 ‘중간선(median line)’을 100회나 월선하는 등 사실상의 ‘침공 예행연습’을 했다. 비록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면 언젠

1) 「예방우선순위조사보고서(Preventive Priorities Survey)」는 미국 외교협회 예방행동센터(Center for Preventive Action)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발생 가능성과 미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갈등 지역의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위험도를 등급별로 평가하고 발표한다.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도 단행하여 건축자재와 철강재 제조에 쓰이는 천연모래의 수출을 중단하고 100여 개 대만기업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영향이 한반도 주변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뒤 서해 남부와 발해만까지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여 추가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전구뿐 아니라 북부전구와 남부전구에 속한 함대도 동원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만 주변에 이은 서해상의 군사훈련이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만해협의 위기가 일상화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유사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고,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기여도 요구가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미중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긴장과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대만문제의 쟁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대만을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

1. 흔들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갈등의 쟁점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에 반발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이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영토'로 규정하고, 대만에 대한 주권은 중국이 갖고 있으며 대만은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하여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을 위협하는 무력에 저항할 역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은 명시하지 않은 채, 대만의 독립과 유사시 개입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중경쟁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심화하고, 대만에 걸린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커짐에 따라 오랫동안 '현상 유지'에 만족해 온 미국과 중국의 호흡도 가빠지는 양상이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는 양안관계(兩岸關係)에는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삼각관계가 존재한다. 하나는 미국,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큰 삼각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공산당, 민진당, 국민당 사이에 형성되는 작은 삼각관계이다. 때로는 작은 삼각관계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큰 삼각관계의 안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작은 삼각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큰 삼각관계가 안정을 견인하기도 한다. 마잉지우(馬英九) 총통 시기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큰 삼각관계의 안정화를 이끈 경우라면, 천수이벤(陳水扁) 정부 시기는 작은 삼각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큰 삼각관계 속의 미중관계가 견고하게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을 제거한 경우이다.²⁾ 그러나 지금의 대만문제는 작은 삼각관계와 큰 삼각관계 모두 불안정성을 제거할 동력과 신뢰가 약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특히 큰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미중갈등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대만 사이에 증대되는 고위급 교류 및 정부 간 협력의 문제이다. 특히 2018년 3월에 미국 의회의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발효된 이후 미국의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의회 의원 그리고 미군 장성 등이 수시로 대만을 방문하게 되었다. 낸시 펠로시와 같은 의회 최고지도자의 대만 방문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에 대해 중국은 ‘정치적 도발’이라고 본다.

둘째,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원문제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배경으로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가입을 지지했고, 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 다양한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할 전망이다. 미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고립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 이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다.

셋째, 대만대표부 개명문제를 들 수 있다. 대만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여권 표지를 ‘Republic of China’에서 ‘Taiwan’으로 개정한 데 발맞춰, 미국은 자국 내 ‘주미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를 ‘주미타이완대표부’로 수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비록 미국정부가 아직까지 이를 실행에 옮기지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보이지 않게 대만독립을 자극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넷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군사 협력이다. 미국은 매년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상당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뒤, 2021년

2) 김영희, 「양안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77호, 2022. 4. 26, p.2.

8월에 7억 5,000만달러에 달하는 對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세 번이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권위주의 대국과 맞서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만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의 모든 행위가 주권국가로서 중국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는 행동이라 보고 있다. 한편, 대만문제는 단순히 미중간의 갈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에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역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및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대만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관련 당사국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역시 2021년 5월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대만문제를 언급했다.³⁾ 2022년 5월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재강조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11월 중간선거와 금년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라는 각자의 국내정치적 이슈가 더해지면서 대만문제에서의 타협과 양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 역시 오는 가을 3연임을 앞두고 공산당 내의 충성심과 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만문제에서 결코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 다만, 양국 최고지도자에게 대만문제가 지지층 결집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무력 충돌로 갈 경우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중갈등이 상존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군사 충돌이 발발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만문제를 바라보는 중국과 미국의 의도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고립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대만과의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영향력 확대정책을 추구해 왔다.

3)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불안정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105/t20210524_9177356.shtml, 검색일: 2022. 8. 13).

중국은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만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의도했다.⁴⁾ 시진핑 집권 1기에도 이러한 대만정책의 기초에 따라 포용정책을 추진했으며, 2015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진핑(習近平)-마잉주(馬英九) 정상회담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2기에 중국의 대만정책은 압박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되 그 표기는 각자 다르게 한다”는 ‘92共識(92consensus)’을 부인하는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이 2016년에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민진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 중국과 대만의 정부 간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관광객 방문도 중단되었다. 중국군은 수시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고,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최근에는 난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완전히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올렸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진핑 주석은 2021년 7월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어느 누구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중국 인민의 강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 막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⁵⁾ 시진핑 주석은 2021년 11월의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난동을 부리고 레드 라인을 돌파하겠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난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지난 7월의 미중 정상간 통화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중국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이기 때문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완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⁶⁾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대만을 압박하는 주요 이유는 첫째, 독립을 모색하는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하는 반면, 대만인들은 공식적인 독립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대만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정권이 등장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관계는 계속 밀접해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압박을 통해서 독립 세력을 고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⁷⁾

4) 신상진, 「중국의 대 대만정책과 대만 정권교체 이후 양안관계 전망」, 『중소연구』, 제40권 1호, 2016, p.7.

5) 『人民日報』(2021年 7月 2日).

6)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중국의 꿈(中國夢)’은 2050년 시점까지 세 가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중합 국력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흥국몽(興國夢)’ ▲군사력 면에서 세계 최강 미국 군대를 능가하겠다는 ‘강군몽(強軍夢)’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통일몽(統一夢)’을 바탕으로 한다.

7) 1991년부터 2021년까지 대만의 중국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935억달러에 달한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m1wnkzwywo>, 검색일: 2022. 8. 21).

둘째,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데에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관련하여 중국 내 국민 통합과 정치적 단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 역시 작용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에 집권한 이후 주요 연설 때마다 “대만 통일은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오는 가을 20차 중국공산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당과 인민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대만 통일’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대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⁸⁾

셋째,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배경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대만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안보는 물론이고 공급망 재편을 포함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도태평양전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대부분 행위들은 표면상 대만을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대만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대만은 실질적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만이 없으면 인도태평양전략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를 모를리 없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압박하여 어떻게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의 동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대만을 압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현재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14개 나라가 대만과 수교하고 있다.⁹⁾ 또한 대만과의 단교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대만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늦출 경우 국제사회가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여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정책의 핵심 기조는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여 대만에 자기방어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중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국 내 동향은 대만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만여행법(2018. 3)’, ‘타이베이법(2018. 12)’, ‘전략적 경쟁법(2021. 4)’ 등은 모두 대만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미국의 대만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미국 상원에 계류

8) 중국은 1993년과 2000년에 이어 금년 8월 10일, 22년 만에 「대만백서」를 발표하여 통일을 실현하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였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臺灣問題與新時代中國統一事業』, 北京: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22년 8월).

9)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이전 대만의 수교 국가는 22개국이었으나,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8개국이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하여 현재는 14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다. 이 법은 대만을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달러 규모의 안보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 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¹⁰⁾ 만일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대만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위배된다는 중국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공격적인 입법이 이어질 경우 미중관계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의 방향을 보이게 된 주요 이유는 첫째, 미국 내에서 중국 주도의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1년 3월에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제독은 퇴임을 앞둔 의회 청문회에서 향후 6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했으며, 동년 10월에 대만 국방부장관은 2025년까지 중국이 전면적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미국에 대만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이른바 ‘칩 4(Chip 4)’ 동맹체제에서 핵심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에 대만은 대중국 견제에서 포기하기 힘든 ‘전략적 자산’인 것이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민주국가 연대를 통한 반중 전선 강화 의도 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가치와 규범의 차원에서 미국은 대만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활용하여 국제무대에서 펼쳐지는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와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고자 한다.

미중간 대립구도 속에서 대만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패권경쟁의 체스판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미국의 지지보다 중국의 더 강한 압박에 눌리는 상황이다. 차이잉원 정권은 미국이 대만을 미중대결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증대되는 중국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 안보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편승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10) 『주간조선』, 「대만정책법까지… 美 의회 대중 공세 속도전」, 2022. 8. 13.

III. 대만문제 관련 우리의 대응방향

중국정부는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에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문제를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한중관계에 미칠 불필요한 영향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문제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동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중국 측도 이러한 한국의 입장과 태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다만, 작년과 올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서는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통해 “내정간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거나 “유관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대만문제를 빌미로 한국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압박하지는 않았다. 이는 미중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만문제를 이슈로 한국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압박할 경우, 한국 내 반중감정이 고조되고 한국을 미국 편으로 더 밀어 버리는 결과를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미중대립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중관계는 물론이고 역내 국제정치에서 대만문제가 차지하는 사안의 중요성과 폭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대립과 위기가 일상화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동원되거나 한국의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증대되며, 경제안보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파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다자무대 및 한중, 한미 양자 대화에서 대만문제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만문제는 미중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쟁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양안관계의 특수성’과 대만문제는 중국이 ‘내정’으로 여기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다수 국가가 양자적으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중국이 마잉지우(馬英九) 총통 집권 시기 대만의 비국가 주체로서의 국제기구 참여를 허용해 왔던 사례를 들면서,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문제를 정치가 아닌 기능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¹¹⁾ 동(同) 표현은 중국을 적시하지 않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 객관적 표현이며, 역내 안정과 평화를 희망하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차제에 한국정부는 동 표현을 대만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과 입장으로 삼고 미국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나아간 입장 표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양안관계와 미중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는 미중대립이 격화되는 추세이고, 대만에서 독립 지향의 민진당이 집권한 상태이므로 대만문제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중관계의 향배 및 대만내 정권 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차기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바, 양안 사이 또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과도한 지지나 편승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차기 총통선거에서도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만과 중국의 대립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까지 상승 작용을 불러일으켜 대만문제의 불안정성은 지금보다 훨씬 고조될 것이다.

넷째, 대만문제 관련 군사 충돌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¹²⁾ 양안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대만에서는 수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¹³⁾ 한국정부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우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및 대만 침공의 조건과 상황을 체크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와 대만의 구원자로 나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만일 대만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첫째, 가능한 군사적 연루를 최소화하고, 둘째,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동맹 역할의 확대를 가능한 수준에서 용인하며, 셋째,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1) 2021년 5월 및 2022년 5월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 필자는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 가능성과 관련하여 2027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27년은 첫째,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이어 4연임을 확정하는 해가 될 것이고, 둘째,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셋째, 대만 17대 총통선거를 앞둔 해이기도 하다. 지금같이 양안의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술한 세 가지가 비타협적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면 어느 때보다 무력 충돌의 유혹과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13) 미국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다룬 저서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Ian Easton, *The Chinese Invasion Threat: 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in Asia*, (Manchester: Eastbridge Books, 2019); David Sacks, “How to Survive the Next Taiwan Strait Crisis,” *Foreign Affairs*, July 29, 2022,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how-survive-next-taiwan-strait-crisis>.

참고문헌

- 박병광, 「넌시 펠로시 대만방문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우리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76호, 2022. 8. 5.
- 신상진, 「중국의 대 대만정책과 대만 정권교체 이후 양안관계 전망」, 『중소연구』, 제40권 1호, 2016.
- 장영희, 「양안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77호(2022. 4. 26).
- 『주간조선』, 「‘대만정책법’까지… 美 의회 대중 공세 속도전」, 2022. 8. 13.
- CFR,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New York: CFR, 2021; 2022.
- David Sacks, “How to Survive the Next Taiwan Strait Crisis,” *Foreign Affairs*, July 29, 2022).
- Ian Easton, *The Chinese Invasion Threat: 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in Asia*, Manchester: Eastbridge Books, 2019.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臺灣問題與新時代中國統一事業』 北京: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22年 8月.
- 『新華網』, 2021年 7月 1日.
-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105/t20210524_9177356.shtml(검색일: 2022. 8. 13).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m1wnkzeywo>(검색일: 2022. 08. 21).